

## 무안공항 다시 찾은 유가족 “책임은 어디 있나”

조류퇴치 시설 인력·장비 등 정상 운영 부실 도마  
유족 동의 없는 잔해물·유류품 현장 정리 등 지적도

“비행기가 추락하고 탑승객이 죽었는 데 조류퇴치를 제대로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유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유족들은 국토교통부와 공항 측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자 결국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 브리핑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유족들은 버스를 타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조류퇴치 시설과 사고 지점인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 주변을 차례로 들러봤다.

그러나 현장 실명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토부와 공항 관계자가 조류탐지 장비와 현재의 퇴치 체계를 설명하자 유족들은 “사고와 무관한 이야기만 한다”, “당시 상황부터 설명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설

명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며 오열했고, “제대로 했다면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 있으느냐”고 읊부짖었다.

특히 사고 당시 조류퇴치 인력이 1명뿐이었다는 설명이 나오자 현장은 더욱 격앙됐다.

공항 측이 “정원은 4명이었지만 당시 근무자는 1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유족들은 “정원만 있고 실제 운영은 불과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변면 반복했고,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주변을 직접 둘러 남아 있는 전해와 유류

품을 확인했다. 일부 유족은 불에 탄 기체 조각을 발견하고 말을 잊지 못했다.

사고 전해 보관소에서도 분노는 가라

앉지 않았다. 1년 넘게 아외에 방지된

잔해들이 방수포에 덮여 있는 모습이 확

인되어 유족들은 “초기에는 방수조치조

차 없었다”며 책임을 따졌다.

결국 브리핑 도중 한 유족이 격분해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밀치는 상황

까지 벌어지면서 현장 설명은 중단되기

도 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

가족협의회 대표는 “문덕 주변에는 분

명히 가족들의 유류품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말끔히 사라졌다”며 “수사도 책

임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

비판 것은 또 다른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은 지난 1년간의 은폐와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현장의 혼란

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유족들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가, 언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라며 국토부와 공항 측에 당시

인력 운영 실태와 시설 관리, 잔해물 정

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양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조류 관

리와 시설 운영, 현장 보존 전반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

력 배치와 잔해 처리 과정 등 핵심 쟁점

을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한파에 움츠린 시민들 광주·전남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일 광주 동구 총장로에 서두꺼운 의류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을 맞아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에 3~10cm, 광주와 전남 중부 지역에 1~5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교육청, 초등학생 6만7260명 학급 배정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 6만7260명에 대한 공립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완료했다.

2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공립초는 151개 학교로 학급 수는 3678학급이다. 지난해보다 95학급이 줄었다.

학급별로는 일반학급 3489학급, 특수학급 177학급, 다문화학생 밀집초는 한국어학급 12학급이 설치됐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0.6명 감소한 19.3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년별로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의 배정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인 하남중앙초, 대반초, 월곡초는 1~6학년 전체 20명, 영천초, 어동초는 1~4학년 20.4명, 5~6학년 22명 등 학급 기준을 완화해 배정했다.

학급별로는 일반학급 3489학급, 특수

학급 177학급, 다문화학생 밀집초는 한국어학급 12학급이 설치됐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0.6명 감소한 19.3

명이다.

### 광주송정역 ‘호남 대표 관문’ 재탄생 프로젝트

#### 광장 확장·체류형 공간 조성…병목 교통 구조 개선 기대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호남 대표 관문 위상에 걸맞은 거점역으로 조성하고자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속열차(KTX) 등을 이용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후 어인숙 등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역 광장 면적은 약 1만3120㎡로 늘어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의 승·하차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상습적인 교통 혼잡 문제

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및 업무 보

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산구는 역 광장이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관문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광장과 외부 공간이 협소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하루 이용객은 KTX 개통 전인 2015년 3327명에서 최근 2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2030년이면 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면적을 5755㎡에서 1만799㎡로 늘리고 넓은 대



광주송정역광장 조감도.

역 광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장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송정역 광장은 동대구역(2만 5638㎡)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송정역 택시승강장은 16면, 버스 승강장은 2면에 그쳐 대중교통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대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 혼잡도 심각하다. 동대구역의 경우 택시 승강장 130면, 버스승강장 8면을 갖춰 각각 8배, 4배 규모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물 07:39 일풀 09:08  
해림 17:49 일점 20:15



### 택시 뺏고 기사 때린 공무원

만년필 ○…택시 운전사 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0분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서 순천시 공무원 A과장(5급)을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

A과장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한 후 기사를 폭행한 혐의.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차리를 피하자 돌연 택시를 물고 2km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 멈춰 섰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과장을 체포.

A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과장은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 업주 협박공갈한 일당 처벌

#### ‘미성년자 주류제공’ 악용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의 B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 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디”며 합의금을 요구해 업주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다른 주점 업주에게도 9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달 27일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